

네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7.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1
III. 성장의 동인 및 장애요인	4
IV. 정치·사회동향	6
V. 국제신인도	8
VI. 우리나라와의 관계	9
VII. 종합의견	10

네 팔

I. 일반개황

면적	147천 Km ²	GDP	69억 달러(2006년)
인구	25.9백만 명(2006년)	1인당 GDP	266달러(2006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Napalese Rupee(NR)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72.76 (2006년)

- ▶ 인도 북부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으로서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임.
- ▶ 동국은 전통적인 농업국으로 가내생산을 통해 주로 식물, 의류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GDP의 38%를 차지하는 농업 생산량에 따라 경제성장이 좌우됨. 사회간접자본시설 미비, 기술 및 자본 부족 등 전반적인 경제구조는 취약한 편임.
- ▶ 회계연도 : 7. 16 ~ 7.15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f
경제성장률	3.9	4.7	3.1	2.8	3.7
재정수지 / GDP	-2.5	-1.0	-0.8	-1.7	-3.0
소비자물가상승률	5.7	2.8	6.8	8.3	8.3

자료 : IFS, EIU

□ 정치 불안으로 인한 경제 부진 지속

- 최근의 정치 불안으로 건설, 관광산업 등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강수량 부족과 국지적인 홍수로 전체 GDP의 36%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의 성장이 2006회계연도 기준 0.6% 성장에 그치고 주요 수출품인 의류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2006년도 경제성장률이 2.8%에 머무는 등 경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2007년도 경제성장률은 금년 11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평화적인 연합정권 구성이 이루어질 경우 3.7%의 성장이 예상되나, 정치적 불안이 심화될 경우 경제성장률도 2.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

- 세원 부족과 함께 석유 제품에 대한 과도한 정부 보조금 지급, 정치 불안에 의한 해외원조와 관광 수입의 감소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황임.
-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대외원조와 해외차입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12일 발표된 2007/08회계연도(2007.7.16~2008.7.15) 예산안에 의하면 동 기간중 재정수입의 27%에 이르는 원조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음.

□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 소비자물가는 주로 식료품 가격 및 석유제품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정부의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농업 부진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상승,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위축 등의 요인으로 8.3%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도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국영기업 민영화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

- 네팔 정부는 경제개혁과 부족한 정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92년 이후 지속적인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음.

-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네팔농업개발은행(NADB)을 민영화하기로 하고 전체 지분의 65%는 정부가 보유하고 5%는 60만 명에 이르는 농민들에게 배정하며 나머지 30%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정치 불안으로 민영화 과정이 중단되고 있음.
- 2007년 6월 22일에는 최근의 정치 불안에도 불구하고 네팔 최대 국영통신회사인 Nepal Telecom사의 지분 15%(2,250만 달러 규모)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등 개혁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2. 대외 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경 상 수 지	-120	-45	1	185
경 상 수 지 / G D P	-2.0	-0.7	0.0	2.7
상 품 수 지	-1,091	-1,135	-1,374	-1,526
수 출	663	773	903	818
수 입	1,754	-1,908	2,276	2,344
외 환 보 유 액	1,213	1,453	1,490	1,639
총 외 채 잔 액	3,176	3,332	3,217	3,3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67.2	65.2	59.0	56.2
D . S . R .	7.3	4.5	5.1	5.0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 적자 속에 경상수지는 소폭의 흑자 유지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절대적인 상품수지 적자 상태에 있으나, 경상수지는 관광 수입, 세계 25개국에 진출해 있는 자국 근로자들의 송금, 원조국들의 무상 원조 등으로 소폭의 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음.
- 2005년 2월, 가넨드라 국왕의 의회 해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원조 유입은 감소하였지만 국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네팔인들이 증가하면서 해외 근로자의 국내 송금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국외근로자의 송금액은 2005년 기준 약 8.9억 달러로 GDP의 12%에 해당하며 전체 제조업 비중(8%)보다 큼.

□ 외환보유고는 비교적 안정적

- 네팔의 외환보유고는 해외근로자들의 국내앞 송금 및 해외 원조 등을 통해 2006년말 기준 16억 3,900만 달러로 수입의 8.4개월 분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III. 성장의 동인 및 장애 요인

1. 성장의 동인

□ 세계적인 관광산업 보유

- 네팔은 해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8좌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음.
- 총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2005년 2월 가넨드라 국왕의 정부해산 조치 이후 각국 대사관들의 자국민에 대한 네팔 여행 자제 요청으로 방문객 수가 감소되는 등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2006년 4월 민주화 시위로 국왕이 물러나고 동년 11월에는 공산반군과 정부와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등 정국이 안정되면서 관광객 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음.

□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발효

- 2005년 12월 1일, 서남아 7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인 SAFTA가 발효됨으로써 역내 최빈국중의 하나인 네팔은 2015년까지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해야 하지만 최빈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장기적인 구조 개선 효과와 역내 교역 증대가 전망됨.

2. 성장의 장애 요인

□ 농업 및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구조

- GD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7%(2006 회계연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1970년대의 70%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상당폭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전체 노동력의 81%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음.
-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그치고 있으며 제조업의 성장 장애요인으로는 정치적 불안 요인 외에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미성숙한 국내소비시장 및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의한 해상운송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경제정책이 대외원조에 크게 의존

- 제10차 경제계획(2002/03~2007/08)이 진행중으로 동 기간동안 빈곤타파와 재정 및 금융개혁, 취약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총 6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투자자금은 대부분 네팔개발포럼으로 명명되는 원조국 회의에서 결정되는 원조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임. 그 예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007년 6월 13일에 1,600만 달러에 이르는 금융지원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2003년 11월 동국 앞으로 승인한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PRGF)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이번 금융지원 건을 포함하여 그동안 5,900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였음.

□ 교역의 대부분을 인도에 의존

- 인도가 2006년 기준 네팔 수출의 68.3% 및 수입의 67.1%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교역의 대부분을 인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네팔에 대한 인도의 정책이 급변할 경우 네팔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 큼.
- 특히 경제에 필수적인 석유를 인도석유공사(IOC)로부터 유일하게 공급받고 있는데 2007년 5월 네팔석유공사(NOC)가 경영난으로 석유대금 9,000

만 달러를 미납한 이후 인도석유공사가 석유 공급을 40% 축소시킴으로써 네팔 경제가 거의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이후 양국간 협정으로 석유 공급이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최근의 정치 불안으로 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석유 부족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것으로 우려됨.
- 또한 내륙국가인 네팔은 인도와 운송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 국경 21개 지역(이중 15개 지역은 국제거래 거점)을 무역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인도와의 협력관계가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IV.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민주화 시위로 인한 국왕의 퇴진과 임시정부 구성

- 최근 네팔의 주요 정치 변동 사항
 - 2001. 6. : 당시 결혼 문제로 인한 디펜드라 왕자의 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의해 비넨드라 왕을 포함한 왕가 일족이 사망한 후 가넨드라 왕 즉위
 - 2002. 5. : 공산반군에 대한 대처 문제로 정쟁이 심화되자 가넨드라 국왕이 하원을 해산
 - 2005. 2. : 정부를 해산하고 가넨드라 국왕이 전권을 행사
 - 2006. 4월 초 : 공산 세력과 연합한 민주화 시위로 국왕이 권력에서 물러남
 - 2006. 4. 30. : 제1야당인 네팔의회당의 당수인 코이랄라가 총리로 취임
 - 2006. 11. 21 : 공산반군의 무장 해제 및 정치 참여를 전제로 공산 반군과 임시정부간 평화협정 체결
 - 2007. 11. 22 :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 실시 예정. 제헌의회에서 왕정 유지 또는 공화제 구성 결정 전망.

- 가넨드라 네팔 국왕은 2005년 2월 1일 정부를 해산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이후 스스로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1990년 이래 유지되었던 의회군주제는 잠정 폐지됨.
- 2006년 4월초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공산 세력이 연합하면서 시위 사태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있는 후 국왕이 권좌에서 물러남. 7개의 야당으로 구성 된 임시정부는 공산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1월 22일에 신 헌법 제정을 위한 제정의회 총선을 실시할 예정임.

□ 향후 총선 결과에 따라 평화 정착 여부가 결정될 듯

- 비록 네팔 공산 반군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UN 감시하의 무장 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산 반군내의 일부 세력들은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있어 총선 결과에 따라 분쟁이 재연될 수도 있음.
- 또한 공산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재의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왕정 폐지에 대해서는 임시 정부 및 일반 국민들의 반대 의견도 많아 공화제로의 전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향후 공산 반군과의 평화적 공조가 불확실한 상황임.

2. 사회 및 국제관계

□ 임시정부와 공산 반군과의 평화 협정 체결

- 공산 반군은 네팔 전체 국토의 3분의 2 지역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수도 카트만두로 통하는 도로 봉쇄를 통해 도시를 고립시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음.
- 공산 반군은 2006년 4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연합하여 가넨드라 국왕을 퇴진시키고 임시정부를 구성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였으며, 2006년 11월 임시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었음.
- 2007년 5월에는 새로 구성된 하원 의원 329명 중 83명을 공산정당에서 배

출하였으며 임시 정부내 장관직 22개중에서 4개를 할당 받았음. 2007년 11월의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하였음.

- * 공산 반군은 중국의 마오쩌둥이 주창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1966년에 조직되어 1996년에 인민전쟁(people's war)을 선포함. 초기 6개 지역에서 시작된 인민전쟁은 현재 네팔 75개 전 지역으로 확대된 상태이며 군주제의 철폐와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목표로 하는 반군과 정부군의 충돌로 지금까지 약 13,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 종족간 갈등 가능성 상존

- 네팔은 다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7년 1월 남부 테라이 분지에서 시작된 마데시족의 소요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들은 전체 네팔 인구의 30%를 구성하고 있는데 정치 및 사회 제반 분야에서의 구성 비율은 15%도 되지 못함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 네팔이 제헌의회 총선을 실시하게 된 것을 계기로 각 종족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인도가 정치, 경제적으로 절대적 영향력 행사

- 네팔의 정치 및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도는 자국내의 공산 세력과 네팔 공산반군과의 연계를 우려해 오고 있으므로 네팔 공산 반군의 제도권 정치 참여를 환영하고 있음. 단, 네팔 공산반군의 제도 정치권 진입의 전제 조건으로 확실한 무장 해제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음.

V. 국제신인도

1. 외채 상환 태도

- 원조지원 감소에도 단기적 외환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정부재정 부족분을 해외원조자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외채부담이 꾸준히 증대되었음. 1980년대 초반의 경우 GNP 대비 총외채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56.2%로 최근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부담이 과중한 편임.
- 대외채무와 관련하여 리스케줄링 사례는 없으며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 지원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근로자의 안정적인 송금 유입으로 단기적인 외환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음.

2. 국제시장평가

□ 정치 불안 등으로 주요 기관의 평가 제외

- 그동안 정치적 불안정 등의 이유로 S&P, Moody's, Fitch사 등 주요 국제 신용도 평가기관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Euromoney 및 I.I.만이 평가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 o O E C D : 7(2005. 4) → 7(2006. 4) → 7(2007. 3)
- o Euromoney : 150/185(2005. 9) → 144/184(2006. 9) → 144/185(2007. 3)
- o I. I : 116/173(2005. 9) → 132/172(2006. 9) → 141/174(2007. 3)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EXIM) : 공공부문에 대한 부보위험 제약조건만 가능
- 네덜란드(Atradius) :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영국(ECGD) : 인수 불가
- 독일(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VI.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는 1,333만 달러 수준에 불과

- 수출 : 1,239만 달러

- 수입 : 94만달러

□ 한국, 대 네팔 투자도 미미

- 2006년 6월말 기준 우리기업의 대 네팔 총투자는 6건, 636만 달러에 불과하여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VII. 종합 의견

- 경제가 농업과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최대 수출 품목인 의류 부문도 대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의 정치 불안 악화로 경제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임.
- 가넨드라 국왕은 2005년 2월 정부를 해산하며 전권을 장악하였으나, 2006년 4월초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공산 세력이 연합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남. 7개의 야당으로 구성된 임시정부는 공산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1월 22일에 신 헌법 제정을 위한 제정의회 총선을 실시할 예정임.
- 네팔 공산 반군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UN 감시하의 무장 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총선 결과에 따라 분쟁이 재연될 수도 있음. 또한 공산정당은 현재의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왕정 폐지에 대해서는 임시 정부 및 일반 국민들의 반대 의견도 많아 공화제로의 전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향후 공산 반군과의 평화적 정권구성이 불확실한 상황임.

선임연구원 손 승 호 (☎3779-6672)

E-mail : aojai@hanmail.net